

#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배포일시

2013. 10. 20 (일)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419 호  
전화 02)784-2820, 팩스 02)788-0153 (문의 : 김원호 비서관 010-9384-3651)

## 국내 산불무인감시카메라 94%가 기준이하 제품

최근 3년간 120억 들여 설치한 카메라 대부분이 혹한기에 무방비  
최저 화질에 못 미치는 제품 많고, 꺼놓는 겨울철에도 고장 잦아  
무려 305일간 고장 상태 방치한 곳도 있어

[표1]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최저사양 기준 대비 부적합 현황: 2011~2013.9월 설치 기준

	전체	적합	부적합	부적합률
서울	4	0	4	94%
부산	13	0	13	
대구	11	0	11	
인천	8	0	8	
대전	3	0	3	
울산	2	0	2	
경기	19	2	17	
강원	20	4	16	
충북	28	0	28	
충남	9	0	9	
전북	30	4	26	
전남	36	2	34	
경북	45	0	45	
경남	68	0	68	
제주	7	0	7	
북부청	24	0	24	
동부청	11	0	11	
남부청	15	12	3	
중부청	9	0	9	
서부청	10	0	10	
과학원	30	0	30	
합계	402	24	378	

산림청이 국내 산불방지를 위해 120억을 들여 설치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대부분이 기준 이하 제품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시카메라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정작 가동해야할 산불조심기간에는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기종에 대한 사양 내역서’를 분석해본 결과 최근 3년간 설치된 카메라 402대 중 94%에 해당하는 378대가 산림청이 정한 최소사양 기준에 미달했다.

부적합으로 드러난 사양으로는 동작온도<sup>1)</sup>와 S/N비<sup>2)</sup>, 방향전환각<sup>3)</sup>, 유효화소수<sup>4)</sup> 등으로 대부분 카메라 작동과 화질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가장 많은 부적합률을 보인 것은 카메라 동작온도로 전체 카메라 중 69.5%가 산림청이 정한 최소 기준인 영하 25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대부분이 혹한기에 기온이 떨어지는 산속 정상부에 설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 작동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표2]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최저사양 기준 대비 부적합 현황: 2011~2013.9월 설치 기준

카메라 사양	최저사양기준	부적합 수	전체대비 비율
동작온도	-25℃~50℃ 이상	280	69.5%
SN비	52dB 이상	249	61.9%
방향전환각	좌우 350도이상 상하 -70° + 20°	79	19.6%
유효화소수	811(H) x 508(V)	63	15.6%

실제로 산불조심기간이 아닌 12월 15일부터 다음년도 1월까지의 통상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가동되지 않음에도 겨울철 발생한 고장 수리 내역은 최근 3년간 25.8%에 이른다.

[표3] 산불무인감시카메라의 겨울철 고장수리내역: 2011~2013.9월 사이 기준 (단위: 건)

	발생건수		수리액	
	건수	발생률	비용	전체대비 비율
겨울철 발생한 고장수리내역	62	25.8%	391,523	22%

- 1)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
- 2) 신호대 잡음비. 그 값이 클수록 더 좋은 화질을 제공한다.
- 3) 좌우상하 카메라가 전환할 수 있는 방향각.
- 4)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 최소단위의 명암점. 단위가 높을수록 정밀한 화면을 구성.

문제는 이뿐 아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소모품 교환, 노후시설 점검, 장비작동 상태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속 기관들은 산불조심기간이 도래했음에도 고장난 산불카메라를 수리치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4]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고장·수리 현황 : 2011~2013.9월 사이 기준

	지역	고장일	수리일	고장내역	방치기간	산불조심기간
1	대구광역시	2011.05.15.	2011.11.03.	카메라 교체	172일	(봄철) 2월1일 ~ 5월15일  (가을철) 11월1일 ~ 12월15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
2		2011.08.20.	2011.11.20.	Surge protector고장	92일	
3	광주광역시	2011.10.28.	2011.12.26.	코덱, 카메라 교체	29일	
4		2011.10.11	2012.11.11.	코덱교체, 팬틸트수리 등	31일	
5	울산광역시	2012.05	2012.12	카메라교체	7개월	
6	남양주시	2011.08.31.	2011.11.18.	영상부, 컨트롤리시버	79일	
7		2011.01.12.	2011.04.01.	카메라 코덱, 렌즈	79일	
8	가평군	2011.07.28.	2011.11.07.	전원공급케이블 교체	113일	
9	보령시	2012.10.15.	2012.11.15.	카메라 시스템 파괴	31일	
10	익산시	2012.10.03.	2012.11.14.	카메라 교체	42일	
11	장흥군	2012.08.31.	2012.12.17.	태양전지판 등	108일	
12	해남군	2011.09.01.	2011.12.21.	장비함체 등	111일	
13	무안군	2012.01.05.	2012.11.06.	리시버유닛 등	305일	
14	인제관리소	2010.06.29.	2010.12.01.	차폐형전원자동복구기	155일	
15		2010.06.29.	2010.12.02.	비디오코덱	156일	
16		2010.06.29.	2010.12.03.	리시버교체	157일	
17	과학원	2012.06	2012.12	전송장비, 전원설비	6개월	

이처럼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산림청이 카메라에 대한 구입 예산만 지급할 뿐 카메라 기종 선택과 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감시카메라 설치 효과에 대한 자료조차 집계치 있지 못한 실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산림청은 기준 미달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데 매년 50여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운영되는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산림청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불방지카메라의 효과적 사용과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4]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관련 예산 : 2011~2013.9월 사이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신규설치	4,160	4,160	3,840	12,160
교체	792	1,476	1,056	3,324
유지보수	475	491	491	1,457
합계	5,427	6,127	5,387	169억4천1백만원